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권시민단체 공동요구에 대한 답변

1. 우리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인권시민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인권시민단체 공동요구에 대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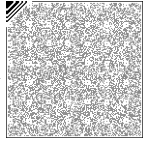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강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관심과 비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요구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ICC 승인소위의 인권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권고 이행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여 인권위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전원위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2014. 9. 22.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ICC는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심사를 재연기한다고 알려왔고 위원회는 2015. 1. 12.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9. 22. 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귀 단체가 문제제기한 발언은, 이날 현병철 위원장이 위원회법 개정안 의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던 중 나왔던 내용입니다. 당시 회의는 위원회가 의결한 위원회법 개정안의 수정여부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으로 여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의제기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ICC의 요구 배경과 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설명을 하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들의 논의과정중 개정안 의결과 관련 부정적의견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ICC 권고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인권단체의 문제제기가 ICC에서 받아들여진 점을 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CC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고 설명하며 인권위법개정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설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장의 발언은 시민사회를 비난하고자함이 아니라 위원들의 이견에 대해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표현으로 설명한 것으로 결코 시민사회 역할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시민사회와 ICC의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위 발언에 대한 일부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 1. 14.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설명과 함께 위원회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은 위 표현과 관련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과 향후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립배경 및 지금까지의 활동과 국제 인권기구의 절차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활동가의 의견을 위원회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은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비판과 대안제시를 경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원위 회의록 실명공개 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파리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방식 중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의 준수와 다양하고 민감한 인권현안들을 논의하며 의결하는 인권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여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익명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전원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므로 인권단체의 회의록 실명공개 요구에 대해 전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는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안전망의 미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으며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의 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막중합니다. 올해로 설립된 지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시정하며 우리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번 ICC 권고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시민사회의 도움이 매우 소중합니다. 언제든지 비판과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해주시고 잘하는 점은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기구로 커 나갈 수 있게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장에서 사회적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담당 **차승렬** 홍보협력과장 전결 2015. 1. 28.
김용국

협조자

시행 홍보협력과-113 (2015. 1. 28.)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1층 홍보협력과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871 팩스번호 02-2125-0920 / priming@humanrights.go.kr / 대국민 공개